



# 낙농정책 메아리어 울려라!



박재호

(경북낙농협동조합장)

“역할분담이란 명분을 내 세워 자식새끼 보다 더 귀중하게 아끼고 길러온 고능력우의 도태강요, 어느나라 낙농정책에 돈 주면서 고능력우 도태하라는것이 있었던가요, 유업체는 한술 더 떠서, 그중에는 장사를 잘해서 원유가 남지않는 유업체도 있을법도 한데 한결같이 우유 남는다고 아우성치며 분유 풀기에 극성이었으니, 지금와서 모자랄때 역시 똑같이 모자란다고 엄살이나 속이 뻗히드려다 보이는데도 당국의 눈은 멀었다고 해야 하겠는지요, ”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전국3만명 낙농 동지 여러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십니까?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으로 인사 드립니다.

산이 변했다고는 하나 농촌 산간에서는 고향을 치면, 아직도 산올림이 메아리 칩니다. 서울 한복판, 이같은 건물 안에서는 방음 장치가 완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좁은 공간인데도 울림이 없습니다. 아직도 농촌 목장에서는 다급해서 고향쳐 부르면 이웃들이 달려와 송아지도 받아주고 짚단도 날라줍니다. 그런데 이 서울 건물안에서는 이렇듯 모여서 수년을 외쳐냈는데도 메아리가 없으니 방음 장치가 너무나 완벽한 탓이라 하겠습니까? 재풀에 지칠줄 뻔히 알지마는, 답답한 심정, 울분이나 털어 놓아보자고 우리함께 모였고 또다시 하소연 해봅니다.

만나는 낙농가 마다 낙농업 전망을 물어 봅니다. 똑 같은 입장인데도, 오죽이나 답답해서 저러나 싶어 나름대로 대답을 해 줍니다. 그 대답의 결론은 긍정적이 되고 맙니다. 물어보는 사람에게 실의를 갖지않게 하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의 희망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농정책 부재」의 현상에서도 낙농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렇듯 잘 꾸러오고 있거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야 말로 낙농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기에 결드려 낙농정책이 제대로 세워져 실행된다면 산고 끝의 옥동자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농정책 부재」라는 말이 나온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있는것 조차도 모르고 지내왔던 낙농진흥법이 1967년도에 입법 되었읍니다. 당시의 낙농가 수는 1,818명 일일 생산 유량이 100t, 헛수로 24년 물량면에서 50배가 성장하기까지 겨우 써 먹었다는 조항이 낙농심리위원회 그것도 원유가를 쥐꼬리만큼 타의에 의해 인상 시켜놓은뒤 사후 회의록만 작성하여 도장만찍어 왔던 것입니다. 상전벽해가 된 이시점에서 개정을 하려드니 얼키고 설켜 작업이 어려울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70년대 말 낙농진흥책을 편다는 것이 유업체를 통한 도입젖소입



식 방법으로 끌고가 이 또한 낙진법 개정작업에서 낙농진흥사업회 법인화라는 기현상을 낳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76년 11월에 취해진 집유선 동결조치 그 이후 생산 농가는 꿈쩍달짝 못하다가도 유업체들은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었으니 예컨대 저의 조합 업무구역내 집유량 130톤의 60% 해당량을 타도인 비락 양산공장으로 동결조치 이후에, 도투락 매일 유업의 지정구역에서 빼아 갔으며 도투락이 경영에 실패 해 남양유업에 양도 될때는 농가는 마치 물건인양 프리미엄업으로 집유권 흥정에 포함되었고 이는 엄연히 집유선 변동인것임에도 당국은 하등의 조치가 없었기에 업체간의 담합 내지 묵제로 이루어 졌었지 낙진법은 커녕 집유선 동결조치도 농가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80년대 들어서 소값파동 우유과동을 두차례나 겪었어도 별무대책으로 농가만 고통을 먹어야 했고 89년도 수차례의 수입저지, 유가보장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겨우 13% 원유값 인상을 시켜놓더니 이를 기회로 업체에서는 50%에 가까운 제품값 인상을 꾀함에도 이 또한 강력한 제지

없이 충격파를 던지게 하여 90년 우유과동으로 이어졌을때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아무리 잇기를 잘하는 한국인이지만 벌써다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역할분담이란 명분을 내 세워 자식새끼 보다 더 귀중하게 아끼고 길러온 고능력우의 도태강요, 어느나라 낙농정책에 돈 주면서 고능력우 도태하라는것이 있었던가요, 유업체는 한술 더 떠서, 그중에는 장사를 잘해서 원유가 남지않는 유업체도 있을법도 한데 한결같이 우유 남는다고 아우성치며 분유 풀기에 극성이었으니, 지금와서 모자랄때 역시 똑 같이 모잘란다고 엄살이니 속이 뻔히 드러다 보이는데도 당국의 눈은 멀었다고 해야 하겠는지요, 그 남는다는 아우성이 몇달이나 계속되었어도 이토록은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서서 원유가 부족하다고 쟁탈전을 벌리고, 심지어는 낙협 집유참여 농가를 농가당 2,000만원씩이나 돈을 뿌려 뺏아가는 것들을 저지른 것이 어느쪽이었는데, 불과 1~2개월 전에 당한 수모와 횡포에 응어리진 울분이 업체들의 쟁탈전에 반사적으로 뛰어듬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는데도 돈을 뿌리다가 한계에 부딪친 유업체들의 담합성 건의를 받아들여 집유질서 유지란 명목으로 취한 소위 1,14조치라는 것을 취한데 이어 분유수입까지 연결시켜놓은 것이 한국의 낙농정책일진데 과연 낙농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친김에 분통하나 더 터뜨려 봅시다. 2년만에 5.2% 원유가 인상, 이것이나마 어떻게 올렸습니까? 5만을 육박하던 낙농가 수가 3만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겠습니까? 낙농에 수지맞는다면 줄어들 이유가 없지요, 살아 남아야겠다는 처절한 낙농가의 뜻을 모아 수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를 찾아 읍소를 하였고 3차례의 낙농육우협회 이사회, 두차례에 걸친 대의원총회, 축협중앙회, 서울우유조합의 자료가 동원되고 끝내는 전국낙농가의 결의대회를 감행할 직전에 가서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농가가 의심할수 밖에 없는 유지방 장난이 있다면 인상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쥐꼬리 인상이지만, 물가

**“ 낙협 집유참여 농가를 농가당 2,000만원씩이나 돈을 뿌려  
 뺏아가는 짓들을 저지른 것이 어느쪽이었는데, 불과 1~2개월 전에  
 당한 수모와 횡포에 응어리진 울분이 업체들의 쟁탈전에 반사적으로 뛰어듬이  
 지극히 당연하다 하겠는데도 돈을 뿌리다가 한계에 부딪친 유업체들의 담합성 건의를 받아  
 들어 집유질서 유지란 명목으로 취한 소위 1,14조치라는 것을 취한데 이어  
 낙농정책이 분유수입까지 연결시켜놓은 것이 한국의 낙농정책  
 일진데 과연 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인상 억제 차원의 변명에 참을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제품값, 인상억제가 되었습니까? 세무사찰 운동등의 엄포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음은 이상할것 없지만 제품값 인상하지 말라고 수입분유값 까지 내려주니 폭리까지 취하면서 한술 더 떠서 유질개선비, 7원을 6개월후 지급이라는 미끼로 낙농가를 담보로 하여 우리 낙농가는 200ml우유 한봉지에 4원 올려받는데 소비자는 10배가 넘는 40원에서 70원을 더 내고 사먹도록 만들었으니 농가 앞에서는 서슬 퍼런 경제기획원도 업체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 일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낙농가는 꿈이 되었고 소비자는 봉이 된 꼴이 된것입니다. 겨우 제재조치 한다는 것이 수입분유의 50%만 유가공협회에 배정하고 50%는 제과업체에 배정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럴바에는 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차액을 피해입은 낙농가에게 돌릴것이지, 소행은 패심하나, 그래도 우유파동때 피해자라고도 할수 있는 유업체이기에 유업체폭리는 남유 농가에게 간접 혜택이라도 돌아 올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얼토당토 않은 제과업체들에게 폭리를 주는 처사는 알다가도 모을 일이라 하겠습니다.

원유가 남으면 젓소를 때려잡고 모자라면 분유를 수입해다 혈한 값에 공급하고 값싼 수입분유 많이 들여와 폭리를 취하고자 원유 모자란다 엄살부리고 가수요가 늘어나 쌓인 분유가 낙농가가 생산한 비싼 원유를 외면토록 할때 우유파동의 악순환은 반

복될수 밖에 없고 그통에 또다시 도태되어가는 것은 이제는 젓소가 아닌 낙농가이고, 수입개방과 때를 같이하여 이나라 낙농업은 말살될 수밖에 없음 이 불을 보든 뺨한데도, 낙농정책부재라고 한다면 억울하다 할 것인가?

수년을 끌어온 낙농진흥법개정, 3,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이 선진국 낙농제도를 모두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예고 까지 마친 개정법률안이 생산자 단체에 의한 집유일원화를 실시 하므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검사를 공영화 하여 분쟁의 불씨를 없애고 수급조절을 피하므로써 안정적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낙농업을 진흥시키는데 목적 있었인데 수년을 끌어오는 동안에 유업체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축협중앙회 걱정을 덜어주고, 정책당국의 감독권을 최대화시키며 경제기획원 물가정책 통제까지 받고보니 낙농진흥법은 고사하고 낙농법이라고 이름붙이기도 민망하다 할것인데도 모법 통과 또한 불투명하니, 낙농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가벼운 중 떠나는 현상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남은 낙농가들마저도 경제 엘리트들로부터 비교우위론을 배워서 힘든 일 수지 안맞는 짓을 하지 않으려두고있어 초지를 조성하거나 양질 조사료 확보에는 외면하고 배합사료와 짚만으로 경제성만 맞추려 들고있으니 초지는 묶어가고 있고

풍부한 자연자원은 잡초를 뒤덮혀가고있으니 외화 낭비만 가속되어가는 딱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 했습니다, 생각없는 짐승들도 길이 막히면 돌아갈줄알고 아무리 신경이 둔한 사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뜨거움을 알듯이 이제 와서야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경제이론만으로 해결될수 없는것도 있고, 비교위위론자들도 공공재의 가치와 기능을 느끼기도 하고 UR협상 뒤에 올 상황도 조금은 눈치 챌것같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행정만능주의 편의주의도, 위헌소원방법으로 파기하고자하고 부가가치세도 부당하면 항변도 나올수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음에서 시대의 흐름과 의식수준의 높아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낙농업 분야에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현상은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낙농협동조합운동임을 들지 않을수 없습니다. 과거의 한국형 협동조합처럼, 지원과 종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라 반대와 역제를 극복하고 낙농가들 스스로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며 슬한 기득세력의 견제와 투쟁을 하면서 권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버스를 대절 한 조합원들이 농림수산부와 국회를 문전 드나들듯 하였으며 축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문을 걸어 닫자 항변도 하였었습니다. 이천낙협은 2년간을 행정 제소하고 끈질기게 참으며 싸워오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인 원유판매사업을 시작하니 조합원이 생산한 자기재산 원유를 자기들이 만든 생산자 단체인 낙협을 통해 자기 권익을 찾겠다고 판매사업에 참여 하였는데도, 불법집유다, 조치위반이다 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그리고 행정 공직자가 찾아와 위압을 가하고 이에 힘입은 유업체들은 또한 기고만장한것이 한국의 낙농현주소지만은 끝내 버티고 이끌어 가고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낙농동지 여러분!

기왕에 우리의 의지가 분출되었다면, 그간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온 기득세력권 낙농가들 까지도 이제는 우리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당국이 발표하는 대책들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책이 될수없음을 들여다 볼수있지 않습니다, 전업농육성책 하나만 보더라도 재원확보방안이 제털뿔아 제구멍막는 식인 축산 기자재에 세금부과 한다거나 기껏해야 수입유제품 판매차액 정도나 생각하고 있음인데, 낙농진흥법개정 작업중 사업회 운영예산정도도 경제기획원에서 체등을 거는 구실이 되고 있음을 보아 의문이 가지않을 수없을뿐만 아니라, 농업을 희생시켜 수출산업을 발전시켰고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무역마찰을 피하겠다면 농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한 농업투자재원 확보는 산업전반이여야 한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연적이어야 할것이며, 이를 성취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단결된 의지가 없고서야 누가 나서주겠는가 말입니다. 이와같은 각오가 결집된 의지들을 모아 감히 외쳐보고자 합니다.

낙농진흥법은 낙농진흥법답게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원유의 특수성을 빙자하여 유업체 일변도의 조치나 왜곡입법을 지양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단체에 유리한 집유일원화는 물론 수급조절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나 국제경쟁력 재고방편으로라도 가공시설 허가권을 당연히 농림수산부로 이관되어야 할것이며 소위선진국에서는 지금도 오히려 강화입법하고 있는 낙농업 보조정책을 우리라고 못하란 법이 어디있겠는가? 낙농산업진흥은 낙농가만의 수익보장이 아니요,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산지자원의 황폐를 막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의 균형발전 내지, 자연보호 환경개선등 공공재를 보전 확보하는 차원의 인식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범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사료등 낙농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폐지는 물론이지만 유제품수입에서 생

**“ 캔 집유시에는 낙우회 단위로도 공동출하 형식으로  
 사실상 집유사업을 할수있었는데 탱크로리 집유방법이 이루어  
 짐으로 해서 보조검사원제도가 잠정조치로 취하여짐 으로서 집유장이  
 없는 협동조합이 원유공동판매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법집유로 해석하고 사는쪽  
 업체의 보조검사원이 조합의 탱크로리에 탑승하여야 불법이 아니라  
 고 하여 사실상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처사를 하고있습니다. ”**

겨날수있는 수입차액은 곧바로 원유증산시책에 투입 되어야 할 것이고 사이비 농민을 배제한 진실한 낙농가의 전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는, 투기성 운운하여 세원 확보에만 급급치 말고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이 과감히 이루어 져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이 모두의 주장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낙농위기를 제대로 인식한 발상전환과 실행의지가 요청되며 무엇보다도 생산자인 낙농가의 대등단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입개방화 시대에 낙농업이 살아 남을수있는 길은 이길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평생 농촌운동 외곶살이를 보람있게 결심했고자 낙농협동조합 설립에 앞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가 과정 회원조합가입 부터 기득권 세력은 물론, 정책지원 당국과도 투쟁의 연속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14 집유질서 행정조치, 낙농육우지에 본인의 뜻을 상세히 밝혔기에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물가안정을 최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당국이 업체의 일방적 제품값 인상의 우롱에도 취소도 하지않고 있음을 보아 역시 농민편이 못된다는 인상을 짙게 느끼게 하고있고 캔 집유시에는 낙우회 단위로도 공동출하 형식으로 사실상 집유사업을 할수있었는데 탱크로리 집유방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보조검사원제도가 잠정조치로 취하여짐 으로서 집유장이 없는 협동조합이 원유공동판매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법집유로 해석하고 사는쪽 업체의 보조검사원이 조합의 탱크로리에 탑승하여야 불법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 조합업무를 방해하는 처사를 하고있으며 엄연히 축협 회계처리규정에 따른 수탁판매사업으로 기장처리 될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 현상을 감지하고서도 조합을 육성하여 집유일원화를 실천하겠다 면 충분히 보완조치가 가능함에도 하등의 성의가 없음은 물론, 집유일원화 실시 이후에도 탱크로리 집유방법으로 집유장시설의 필요이외 지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작업은 미동도 않고 있음으로 보아 이또한 당국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낙농업 현실의 구체적 사례, 낙농진흥법 개정작업의 변질내용 분유및 유제품 수입문제 사료등 기 자체 부가가치세, 축산진흥기금 및 농발법에 관한 기금조성문제 집유선동결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 소원제기와 진척사항, 낙농문제에 관한 경제기획원의 시각, 낙농관련단체간 협조문제, 집유일원화를 위한 각종 시행령마련, 등등 이 모든 문제들 하나 하나가 몇시간을 떠들어도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것입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뜻을 전하고자 함에 수박 겉 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소에 공감을 하고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올때까지 왔고 이제야 말로 우리의 외침에 메아리 칠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나를 책(責)하기에 바쁜 오인(吾人)은 남을 탓할 겨를이 없다」 하는 기미독립선언문 구절을 되뇌이며, 우리 3만여 농동자를 모아 정기국회 회기 처리과정과 당국의 처사를 예의 주시 해 보기로 합시다.